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이재용 사건 심의서 빠지겠다”

법조인 동정

〈양창수 前대법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68, 사법시험 제16회)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고 1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오는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며 “그 이유는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의 오랜 친구관계다. 그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9·부회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제22회 동창이다.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사장)과 달리 최 전 실장은 수사심의위 개최를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들과 함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수사심의위는 오는 6월 26일 열린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제11조는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 주임검사, 신청인은 위원장에게 기피·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원장도 기피·회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호선해 회의를 진행한다.

양 위원장은 2009년 5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최근 매일경제에 기고한 칼럼, 자신의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모두 합하더라도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의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12일 오후에 검찰총장이 위원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회피 여부를 검토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결심에 앞서 혐의 사실에서 최지성의 위치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주말이 지나고 어제(15일)에서야 현실적으로 가능했다. 절차를 대검찰청 위원회 담당 검사와 함께 확인하고 논의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오는 6월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의 의사를 위원들에게 밝히고 위원장 대리의 선임 등에 관해 관련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자리를 벗어날 것'이라고 했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현안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현안위원회는 150~250명의 수사심의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수사심의위는 현재 현안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원장은 현안위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되, 표결이나 질문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 현안위원들은 회의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문할 수 있다. 현안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의견이 갈리면 표결을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사심의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현안위에 출석한 위원이 호선을 통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직무 대행도 표결이나 질문에 참여할 수 없다.

(출처/경향신문)